

한국타이어 돌연사 결론 “어정쩡”

역학조사팀 조사방법 · 기준 문제제기 ... 화학물질 중독 가능성 밝혀야

2월20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한국타이어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집단 돌연사와 관련해 최종 역학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유족과 회사측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타이어는 최종 역학조사 결과 발표 후 “화학물질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며 되려 “역학조사팀의 조사방법과 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타이어 한 관계자는 “역학조사팀은 고무흡의 총량이 기준을 넘었다고 발표했으나 대전공장은 초과된 곳이 없고 금산공장 2곳에서 영국보건안전청 노출기준을 초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에서는 분석방법이 법적인 작업환경 측정방법으로 채택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역학조사팀이 측정근로자 중 46%에서 85dB를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고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내 법적기준은 90dB로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고 또 실제로 소음이 높은 곳에서는 효과적인 귀마개 등 청력보호장치를 하기 때문에 근무 중인 사원이 85dB 이상의 소음을 느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2008년부터 주변온도 저감을 위한 방열칸막이 및 가류공정 흡(Fume) 배기개선을 위한 환기구 설치 등 67억원을 투자해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족측 역시 작업환경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에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통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역학조사팀이 “심장성 돌연사와 암 등에는 개인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망한 직원들의 산업재해 처리 여부는 개별 사망사례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심의해야 한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유족대책위측은 “추가 조사를 통해 반드시 화학물질 중독 가능성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인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과 노동청 등 사법당국은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현장 노무관리에 대해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또 사태의 명확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대전지방노동청사 앞에서 벌이고 있는 천막 농성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8월 유족들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한국타이어 집단 돌연사 사인 논쟁은 공공기관의 최종 역학조사가 결과 발표로 6개월여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해 당사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론으로 갈등의 씨앗은 그대로 남게 됐다.

한국타이어 대전 및 금산공장, 연구소에서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7명이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 경화증,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등으로 숨지고 5명이 폐암과 식도암, 뇌수막종양 등으로 숨진 데 이어 1명이 자살하는 등 1년여 사이 모두 13명이 사망하자 정부가 나서 역학조사 등을 벌여왔으며 1월 중간발표에서는 “돌연사와 작업환경간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발표했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2/21>